



통영 국제음악당 조감도

목 차

■ 건설관련 소식 1

-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현장속으로'
- 경상남도, 2/4분기 '경상남도 청렴 옴부즈만'회의 개최
- '당당한 경남시대', 청렴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사업장 만든다.
- 경남진주 혁신도시 건설 순항중
- 경남도 2015년 사랑 상·하도 하나로 연결
-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 사업 확대시행
- 경남과학기술진흥원, 5월 30일 개원식 열어
- 하동 갈사만에 3개 업체 300억원 유치
- 거제시, 풍력발전단지 조성 MOU 체결
- 산청 엑스포 100일 남았다!

■ 지식정보 11

-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 개발제한 구역 48곳, 걷고 쉬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 공사중단 방지 건축물 정비 손쉬워 진다.
- 동서남해안 8곳, '휴양체험생태벨트' 조성
-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원룸형 주택 공급, 지역상황 맞게 탄력적으로. . .국무회의 의결

■ 최신법령 및 관련정보 20

■ 신기술 정보 28

■ 건설기술심의 계획 29

■ 계약심사 현황 29

■ 기술인 나눔 정보 30

홍준표 경상남도지사, ‘현장 속으로’

- ▶ 현장 행정 강조 위해 도 현안 사업장 현장 직접 챙겨



<도시재생(마산 창동) 현장 방문>

홍준표 경남도지사가 현장 행정을 강화하기 위해 ‘현장 속으로’ 직접 뛰어 들었다.

홍준표 지사는 5월 6일 오후 수해상습지인 영천지구 하천공사 현장(진주시 금곡면)을 방문하여 사업진행 상황을 점검하고 관계자를 격려했다. 이 공사는 지방하천인 영천강의 제방 등을 보강하기 위해 2011년부터 내년 초까지 진행되고 있는 공사로 총 152억 원이 소요되는 공사이다.

이어 취임 후 처음으로 도 사업소인 산림환경연구원(진주시 이반성면)을 방문하여 업무보고를 받고 야생동물원, 산림박물관 등의 시설을 둘러보았다.

홍준표 지사의 현장 행정 행보는 지난 달 15일 항공국가산단 예정지(사천시 축동면 사다마을)와 정촌산업단지(진주시 정촌면) 내 뿌리산업단지 예정지를 둘러보는 것으로 시작으로 4월 16일에는 밀양 나노국가산단 예정지를, 4월 30일에는 부산·진해경제자유구역 지구개발 현장을 방문하였다.

5월 2일에는 장기 표류하고 있는 거제장목관광지를 방문해 민자유치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강구할 것을 주문하였으며, 거가대교와 거제~마산 간 국도 5호선 해상구간을 둘러보고 애로사항을 청취하였다.

또한, 3일에는 도 도로관리사업소(창원시 의창구 대원동)를 방문해 현황을 청취하고 “도로 신설도 중요하지만 사후관리도 중요하므로 업무에 철저를 기해 줄 것”을 당부하기도 했으며, 같은 날 창원컨벤션센터(CECO)에서 열린 경남도 기업통합지원센터 개소식에 참석하여 “신속한 민원처리로 전국에서 가장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여 경영인들이 경영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이 센터를 중심으로 기업 애로 및 불편사항 해소 등 기업투자에 있어 걸림돌 제거를 위해 노력할 것”을 주문했다.

홍준표 지사는 앞으로도 공식 일정이 없는 날에는 가급적 사업 현장과 도 산하 사업소 등을 방문할 계획으로 7일에는 통영에 있는 수산자원연구소와 수산기술연구소를 방문하고 9일에는 마산 오동동 문화의 거리를 방문할 예정이다.

한편, 홍지사는 지난 달 29일 실국원장 회의 시 “도정 현안 사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중앙부처를 설득하기 위해서는 실·국장들이 현장에 가봐야 한다”며, “현장에 가보지 않고 가만히 앉아서 일을 추진하려고 해서는 중앙부처 공무원들을 만나서 이야기 할 때 설득력이 없다”고 강조하고, “현장에 가면 감이 달라지므로 실·국장들이 시간을 내서 현장을 가볼 것”을 지시하기도 했다.

경남도의 모 사무관은 “최근 진주의료원 폐업문제로 도정이 진주의료원만 있는 것처럼 인식되고 있는 것 같아 안타깝다”면서, “도지사가 실·국·원장회의 시 현장 행정을 강조하고 직접 도 현안사업 중심으로 현장 확인을 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것 같다”고 말했다.

■ 자료 : 공보관실 홍보기획담당
(055)211-2062

경상남도, 2/4분기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 회의 개최

▶ 5월 4일 도청에서, 도민의 입장에 대해 감시 및 평가

경남도는 공사계약 및 관리업무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5월 7일(화) 오후 2시 30분 도청 소회의실에서 경남간호사회 회장인 강숙남 대표 옴부즈만 주재로 2013년 2/4분기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 회의를 개최하였다.

이번 회의에서는 청렴옴부즈만 6명이 지난 3월 도 시행 공공사업의 계약이행 과정에 대해 서류 확인 및 현장을 점검한 결과를 보고하고, 당해공사에 대한 문제점 및 개선책을 논의했다.

회의 결과는 가야~석무 간 도로확포장 공사 등 장기계속사업이 적기 예산 지원이 되지 않아 주민불편을 초래하고 있는 것과 신촌천 외 4개소의 하천기본계획수립용역에서는 하천 측량을 실시한 후 표석매설을 실시하여 측량협회에서 성과심사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현재까지 진행되지 않고 있는 것을 지적했다.

‘경상남도 청렴옴부즈만’은 변호사, 교수, 공인회계사 등 다양한 분야의 전문성과 학식을 갖춘 6명의 외부인사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요사업과 부패취약 분야에 대한 모니터링을 실시하여 부패 비리 예방효과는 물론 행정의 투명성 확보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이선두 경남도 감사관은 “청렴옴부즈만은 우리 도가 시행하는 공공사업을 도민의 입장에서 투명하게 감시하고 평가하는데 큰 의미가 있다”며, “올해에는 공사, 용역, 물품 등 총 140건의 추진 중인 사업에 대하여 도민의 냉정한 시각으로 계약의 이행과정을 점검·개선해 도민들에게 보다 질 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고 도정의 청렴도 향상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감사관실 청렴윤리담당
(055)211-2295

‘당당한 경남시대’, 청렴으로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사업장 만든다.

- ▶ 5월 16일(목) 오후 2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건설관계자 청렴실천 교육 실시



<건설관계자 청렴실천 교육현장>

경남도가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실현을 위하여 금년을 청렴 도정의 원년으로 삼고 다양한 시책으로 청렴도 향상에 노력을 하고 있는 가운데 특히, 건설분야의 투명하고 공정한 건설문화 조기 정착과 국내외 경기 침체로 어려움이 많은 건설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5월 16일(목) 오후 2시, 경상남도 인재개발원에서 도내 주요 건설현장 소장, 감리단장 등 공사 관계자 및 도내 건설부서 공무원 25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2013년도 건설사업 관계자 청렴 실천 교육’을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은 현장소장 및 공무원 대표가 공동으로 청렴결의 선서와 청렴한 경남, 청렴한 건설인을 주제로 한 특강, 2013년도 주요 건설사업 추진 계획 설명 등이 이어졌다.

강해운 건설방재국장은 인사말을 통해 “장기화되는 국내·외 건설경기의 침체와 지역 대표 기업 STX의 유동성 위기에 따른 지역 건설업계의 충격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표면적인 사업 확대보다 건실한 자본 관리가 중요하며, 건설사업 관계자와 공무원들이 청렴 실천에 솔선수범할 때 도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건설문화가 정착되고 지역 건설업이 상생 발전할 것”이라며 건설분야의 청렴을 강조하였다.

한편, 경남도는 지난 3월에도 도 시행도로건설 사업장 담당 공무원과 현장소장 청렴교육을 실시한 바 있으며, 하반기에도 각종 교육이나 회의를 통하여 건설현장 부실시공 예방과 청렴도 향상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할 방침이다.

■ 자료 : 건설지원과 건설지원담당
(055)211-4614

경남진주 혁신도시 건설 순항중

- ▶ 기반조성 99%, 이전기관 청사건립 순조롭게 진행, 서측진입교량 올 7월 준공

경상남도는 진주시 호탄동, 문산읍, 금산면 일원에 건설 중인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기반조성률은 99%로 연내 완료하고 '12년 11월 착공한 한국토지주택공사를 비롯한 11개 이전 공공기관은 '14년 12월까지 청사 준공을 목표로 이전 준비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남진주 혁신도시 조감도>

경남진주 혁신도시는 면적 4백 7만㎡, 수용인구 1만 3천 가구 3만 8천명 규모의 주택, 교육, 의료, 문화 등 수준 높은 정주여건과 자족기능을 갖춘 복합 명품도시로 조성되며 기반조성비는 1조 577억 원이 투입된다.

그간 추진상황은 6개 기관이 '12년까지 착공하였고 그 중 중앙관세분석소는 올 1월 준공하였다. 중소기업진흥공단, 국방기술품질원이 올 10월과 12월 준공할 예정이고 '14년에는 한국남동발전(주), 한국세라믹기술원, 한국토지주택공사가 준공할 예정이다. 현재 미착공한 2개 기관중 한국산업기술시험원은 설계마무리를 거쳐 올 7월 착공할 계획이며, 주택관리공단은 '14년초 착공할 예정이다.

특히 이전 공공기관 11개 기관 중 8개 기관은 신청사로 건립되고 3개 기관은 임차할 계획이었으나 한국시설안전공단, 한국승강기안전관리원 등이 청사건립하는 것으로 이전방침을 변경하여 내부절차를 진행 중에 있어 공공기관 이전에 활기를 띄고 있다.

경남진주 혁신도시의 랜드마크이자 진주시 상평공단과 혁신도시를 잇는 「서측진입교량 가설공사(김시민대교)」는 '13년 7월 준공될 예정이며 향후 혁신도시의 교통문제 해결은 물론 사천공항, 사천 항공산단, 정촌산단 등과의 접근성 제고와 상평공단 물동량을 분산시키는 효과를 가져올 것이다.

아울러 경상남도에서는 혁신도시 시너지 효과를 창출하기 위해 클러스터 용지(216,518㎡)를 조성하여 연관 기업, 대학, 연구소를 유치하기 위한 활동도 적극 펼치고 있으며, 혁신도시로 유입될 11개 기관 직원 및 가족 등 1만명의 정주여건 마련을 위해 35개 행·재정적 이전지원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14년말 공공기관 이전이 완료되고 이전 기관과 연계한 산·학·연 클러스터가 본격 가동되면 경남진주는 명실상부한 혁신도시의 면모를 갖추게 되며, 혁신도시 건설로 인한 파급효과는 2조 6,684억원의 생산 유발효과, 1조 1,492억원의 부가가치 유발효과, 3만 1,421명의 고용유발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 자료 : 공공기관이전단 혁신도시개발담당 (055)211-4613

경남도 2015년 사랑 상·하도 하나로 연결

▶ 사랑 상·하도 간 연도교 현재 공정률 41%, 2015년 개통 목표

경남도는 도서종합개발사업의 일환으로 통영시 사랑면 금평리(상도)에서 읍덕리(하도)를 잇는 사랑 상·하도 연도교를 총사업비 476억 원을 투입하여 2015년 4월 개통을 목표로 공사 중에 있다고 밝혔다.



<사랑 상·하도 연도교 조감도>

이 연도교는 총연장 530m(폭 13.1m), 2주탑 사장교 및 접속도로 935m(폭 11.5m)로 구성되어 있으며, 2010년 4월 착공하여 현재 사장교 주탑 2기를 시공하는 등 현재 41%의 공정률로 경남도는 올해 사장교 주탑 2기를 완료하는 등 58%의 공정률 달성을 목표로 추진 중이다.

사랑도의 지리산은 매화가 벚꽃에게 바통을 넘겨 줄때까지 물에서 온 산행객들로 몸살을 앓고, 연간 36만 명 이상의 관광객이 몰려 섬전체가 들썩인다. 지리산은 아마추어 산행객의 성취욕을 자극하는 산으로 유명하며,

암릉은 초보자에게 오금을 저릴 만큼 아찔해 위에서 내려다보면 마치 천길 바다로 다이빙을 하는 것처럼 가파르다. 이처럼 뛰어난 산세와 옥녀와 그 아버지 사이에 얽힌 슬픈 전설을 간직하고 있기도 하다.

경남도는 관계자는 “이처럼 날로 급증하는 사랑도의 관광객 수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각광받는 남해안의 관광자원으로 개발하기 위해 연도교를 가설하고 있는 것”이라며,

“이 교량이 완공되면 상도에 있는 우리나라 100대 명산중 하나인 지리산(옥녀봉)과 하도에 있는 칠현산으로 이어지는 관광코스가 체계적으로 개발되어 더욱 더 각광받는 관광지가 될 것으로 기대되며, 섬 주민들의 생활편의 증진과 소득증대를 통해 도서민의 정주의욕 고취에도 크게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균형발전단 지역개발담당 (055)211-6435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사업 확대시행

경남도는 저소득계층의 주거복지를 위한 임대보증금 지원사업을 2011년부터 운영 중에 있다. 지원대상자는 임대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 입주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에 거주하는 무주택 가구로서, 지원기간은 2년으로 2회 연장가능하며, 세대 당 지원한도액은 2,000만원 이하로 하였다.

본 사업은 무이자로 임대보증금을 지원하여 퇴거 시 원금을 전액 회수하는 사업으로 2011년도 24세대에 235백만원(도비 94, 시군비 141), 2012년도 65세대에 585백만원(도비 175, 시군비 410)을 지원하였다.

경남도는 사회취약계층의 주거복지 도모를 위해 지원사업을 확대 추진할 계획으로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범위 및 지원대상 자격을 확대하는 「경상남도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지난 15일까지 도민 의견을 받았다.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지원대상 임대주택의 범위를 임대기간 30년인 국민임대주택에서 임대기간 30년 이상인 장기임대주택으로 확대하고, 임대보증금 지원대상자 자격을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에서 무주택 기초생활수급자 및 무주택 차상위계층으로서 최저주거기준 미달주택 거주가구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경남도에서는 저소득계층 임대보증금 지원조례 일부개정조례가 도의회 의결 등 행정절차가 완료되는 7월경 시·군에 시달하여 시군홈페이지 등에 안내 및 홍보토록 조치할 예정이며, 2013년 당초 계획된 66세대보다 30세대가 많은 96세대가 수혜를 받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이로써, 도내 거주하는 보다 많은 저소득계층이 주거생활 안정과 자립기반 마련의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경남도는 전망하고 있다.

■ 자료 : 건축과 주택관리담당
(055)211-4434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 5월 30일 개원식 열어

▶ 연구개발 컨트롤타워 기능을 통한 지역 R&D사업 역점적으로 추진

경남 과학기술 진흥의 중추적 역할을 수행할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이 5월 30일 오후 2시 이상목 미래창조과학부 제1차관, 홍준표 경남도지사, 박완수 창원시장 및 지역 주요인사, 주민 등 약 5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원식을 열고 본격적인 업무를 시작한다.

이번에 개원하는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이하 '진흥원')은 경남 지역 산학연관 교류와 R&D 역량 강화 및 연구개발 인프라를 확충하여 신성장 동력 창출을 위한 연구개발 기획·관리 전담기관으로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수행하게 되며 정부조직개편에 맞춰 미래창조과학부 소관의 지역거점으로 자리매김하게 된다.

진흥원 청사는 지난 2009년 교육과학기술부, 경남도와 창원시로부터 각각 5년간 150억 원 씩 총 450억 원을 투입하여 부지 8,663㎡에 건축연면적 31,376㎡로 지하 2층, 지상 15층 규모로 지난 1월 19일 준공되었다.

진흥원은 산·학·연 R&D센터, 국제회의장, 대·중·소회의실, 세미나실, 게스트하우스 등 연구지원 시설과 커피숍, 편의점, 식당 등 편의시설, 430여대의 주차공간 등의 시설을 고루 갖추고 있다.

경남도에 따르면, 진흥원 입주기업에 대하여는 미래창조과학부 국비공모사업 우선 참여권 부여, 기업수요에 맞춘 연구장비 구축 및 지원, 우수 연구 성과물의 정보제공 및 기술이전, 중소기업진흥공단 등 정책자금 저리 대출 알선 등 다양한 인센티브가 주어지며, 올해 계약한 입주기업은 내년 2월말까지 임대료 20% 감면혜택 등이 부여된다.

경남도 관계자는 “경남창원과학기술진흥원이 창조경제의 지역 산학연관 협력 거점으로서의 역할 및 경남의 과학기술 혁신을 촉진하고, 세계적 다국적 기업과 국내·외 연구기관을 유치하여 경남 미래 먹거리 산업을 창출하는 혁신센터로 발돋움하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 이라고 말했다.



(창원=연합뉴스 사진자료)

■ 자료 : 미래산업과 연구개발지원담당
(055)211-2763

하동 갈사만에 3개 업체 300억원 유치

▶ 하동군, 미래인더스트 등 3개 업체 조선기자재·선박부품 공장건립 MOU

대한민국 해양플랜트의 메카가 될 하동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조성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이곳 갈사만 조선산단에 조선기자재·선박부품 생산업체 3개가 300억원을 투자한다.

하동군은 24일 낮 12시 서울시 서초구 JW 메리어트호텔에서 열린 ‘2013 경남도 투자유치 설명회’에 참가해 미래인더스트리(주), 대명 PMC(주), 태광중공업(주) 등 3개 업체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투자협약(MOU)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서는 홍준표 도지사·조유행 군수·이희봉 광양만권경제자유구역청장이 강종수 미래인더스트리(주) 대표, 안주식 대명 PMC(주) 대표, 이규태 태광중공업(주) 대표와 각각 협약서에 서명했다.

이들 업체는 오는 2015년까지 갈사만 조선산업단지 내 각각 3만 3000㎡(약 1만 평)의 부지에 100억원씩을 투자해 조선기자재와 선박부품 생산공장을 건립, 가동한다.

선박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미래인더스트리(주)는 이날 협약체결에 따라 갈사만 조선산단에 조선기자재 생산공장을 증설하며, 기타장비조립용 플라스틱 제품을 생산하는 대명 PMC(주)는 선박부품 제조공장을 건립한다.

또 선박구성 부분품을 생산하는 태광중공업(주)은 갈사만 조선산단에서 조선기자재를 생산하며, 이들 3개 업체는 각각 50명 이상의 인력을 고용할 계획이다.

이날 협약으로 경남도와 하동군은 이들 업체의 공장건립과 기업활동이 원활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법령이 정하는 범위에서 행정·재정적 지원에 최선을 다하기로 했다.

군은 이날 협약 체결 외에도 수도권 기업 CEO 등 잠재 투자자를 대상으로 경제자유구역 하동지구 현황과 입지여건, 장점 및 인센티브 등을 홍보하며 투자유치 활동을 펼쳤다.

특히 이날 투자유치 설명회에는 조유행 군수, 여상규 국회의원, 이희봉 경제자유구역청장, 하진수 남해안개발과장 등 하동 지역 투자유치 관계자들이 대거 참석해 행사에 참가한 기업·투자 관계자들과 투자 상담을 벌이는 등 공격적인 활동을 벌였다.

한편, 경남도가 주최하고 경남개발공사가 주관한 이날 설명회는 중앙정부 인사를 비롯해 경제단체장, 산업별 주요기업, 출향 기업인 등 5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수도권 기업 투자인센티브, 투자환경 설명, 경남투자 성공기업 사례발표, 투자상담 등의 내용으로 진행됐다.

■ 자료 : 하동군 기획감사실 홍보담당
(055)880-2043

거제시, 풍력발전단지 조성 MOU 체결



거제시(시장 권민호)는 5월 8일 김한표 국회의원, 한국남동발전(주), 거제풍력(주), (주)코네스코프레이션과 친환경 풍력발전단지 조성을 위한 양해각서(MOU)를 체결했다.

풍력발전단지는 거제풍력(주)에서 주도적으로 사업을 추진한다. 일운면 소동리 산 91번지 일대에 1,000억 원의 사업비로 40MW급 규모로 설치한다. 인근지역 주민 설명회, 인·허가 등을 거쳐 2014년 8월에 준공을 목표로 하고 있다.

내년 9월부터 상업운전을 시작해 매년 11만 6천MWh를 생산하며, 이것은 2만 가구가 동시에 사용할 수 있는 용량이다.

이번에 조성하는 풍력발전단지는 지역 업체에서 생산하는 풍력기기를 설치함으로써 풍력 기술력 향상에 기여하고 고용을 창출, 지역 경제 활성화에 기여한다. 또 풍수해 또는 전력 부족으로 단전(斷電)시 거제시민과 지역산업체에 우선적으로 전기를 공급하는 혜택을 제공하게 된다.

거제시는 풍력발전단지 주변에 신재생에너지 체험 관광시설을 설치해 기존 관광지와의 연계, 새로운 관광상품으로 개발해 관광객 유치에도 많은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하고 있다.

한편, 거제풍력(주)은 옥녀봉 인근 현 사업부지에 작년 2월부터 12월까지 약 10개월 동안 풍황을 조사하여 사업성을 확인했고, 통상산업자원부로부터 발전사업 허가를 지난 1월 말에 받았다.

■ 자료 : 거제시 문화공보과 공보담당
(055)639-3384

산청 엑스포 100일 남았다

- ▶ ‘일문일답’으로 알아보는 ‘지리산 힐링 축제’
- ▶ 9.6~10.20 산청동의보감촌 공정률 80%, 전시·행사는 오감만족형

세계적인 블루오션으로 떠오르고 있는 전통의약과 힐링을 주제로 한 산청세계전통의약엑스포가 오늘(29일)로 꼭 100일 남았다. 본격 카운트다운에 돌입한 산청엑스포가 어떤 행사인지 일문일답 형식으로 짚어봤다.

- 산청엑스포는 어떤 행사?

△ <동의보감>발간 400주년을 기념한 국제행사다. 유네스코가 2009년 <동의보감>을 세계기록유산으로 등재하고, 올해를 ‘유네스코 기념의 해’로 선정함에 따라 정부가 기획했다. 전국 5곳이 응모, 산청이 자연환경 및 한방인프라 구축, 사후 활용도 면에서 높은 점수를 얻어 엑스포 개최지로 최종 낙점됐다. 9월 6일부터 10월 20일 까지 45일 간 지리산 끝자락 경남

산청군 금서면 동의보감촌 일대(161만㎡)에서 열린다. 현재 공정률 80%선이다.

- 주제는?

△ ‘미래의 더 큰 가치, 전통의약’ 그리고 ‘지리산 힐링 여행’이다. 엑스포가 열리는 세계전통의약의 현황과 가치를 오감만족형으로 보여주며 관람객들이 힐링하도록 하겠다는 취지다.

- 무엇으로 힐링하나?

△ 산청엑스포 개최지는 지리산자락이어서 다른 축제장과 달리 자연환경이 좋아 걷는 것 자체로 힐링이 된다. 동의보감순례길 걷기, ‘기’체험, 무료한방진료 등 프로그램 모두 힐링 성격을 지닌다.



< 항공촬영한 행사장 모습 >

- 주요 전시 콘텐츠는?

△ 주제관을 비롯해 8개 전시관이 있다. 주제관에선 4D첨단영상관과 한의약 힐링파크에서 전통의약을, 동의보감관은 <동의보감>에 관한 모든 것을 보고 느낄 수 있다. 특히 게임형식의 콘텐츠는 놀이를 즐기는 가운데 약초와 평소 생활습관의 중요성을 알게 해준다.

세계관은 산청엑스포가 국제행사임을 보여줄 흥미로운 콘텐츠로 채워진다. 16개국 전통의약, 5300년전 미라인 ‘아이스맨’특별전은 기대할 만하다. 한의사의 무료 진맥 시술을 체험할 헤민서, 몸에 약이 되는 음식을 접할 약선문화관도 관람객의 눈과 귀를 사로잡을 것이다.

- 이벤트는 어떤 게 있나?

△ 공식행사·상설공연·이벤트·체험 학습행사가 있다. 지리산을 찾아온 불로초 원정대의 이야기를 구현한 주제공연, 7080 추억의 노래, 해외 및 국내 전통공연 등이 있다. 특히 ‘산청 힐링 맨발 콘서트’와 ‘기’체험 프로는 엑스포의 주제를 잘 보여줄 프로그램이다. 맨발로 산청자연을 누비며 콘서트를 즐기고, 한방 기체험장에서 기를 받다보면 도시생활에 지친 피로를 날려버릴 수 있다.

- 전시관 외 즐길 시설은?

△ 한방약초체험 테마공원, 허준순례길, 동의폭포광장, 풍차, 사슴목장 등도 즐길 거리다. 공원과 폭포광장에서 시원한 물놀이를 뽐어주고, 허준순례길은 싱그러움과 녹음을 즐기며 걷는 기쁨을 느끼게 해준다. 풍차와 사슴목장은 어린이 관객 눈높이에 맞춘 볼거리다.

- 찾아가는 길은?

△ 승용차로 서울서 서울에서 3시간, 광주 2시간, 부산·대전·전북·전주 1시간 반 거리다. 총 8,600대를 주차할 주차장도 준비했다. 주차장에서 이동하기 쉽도록 셔틀버스 30대로 관람객 불편을 최소화한다. 노약자를 위한 전기자동차도 운행할 예정이다.

- 숙박시설은 많나?

△ 산청은 시골이다. 힐링 개념에 부합하는 행사장소다. 그래서 도시처럼 화려한 숙박시설은 없지만 관람객이 불편하지 않도록 지리산 지역 펜션마을 등 특화자원을 최대한 활용한다. 도시지역 공식호텔 10개소를 지정했고, 진주·거창·함양·사천·창원 등 도내 숙박시설 현황을 홈페이지에 알린다. 산청관내에선 5,000여명, 인근까지 확장하면 3만 명 이상 수용가능하다. 특히 국제행사 최초로 ‘원스톱 숙박대행 서비스’ 숙박예약시스템을 구축할 것이어서 원하는 숙박시설정보를 실시간으로 얻고 예약을 할 수 있게 해줄 것이다. 할인맛집 안내 등 차별화된 콘텐츠도 준비 중이다.

- 입장권 예매 등 기타 의문점 문의할 곳은?

△ 홈페이지(www.tramedi-expo.or.kr)를 통하면 상세히 답해준다. 입장권도 성인 어린이 단체관람객 등 분류별로 6월말까지 사전예매중이다. 조만간 콜센터도 운영한다. (055)970-8600.

■ 자료 : 산청군 기획감사실 공보담당
(055)970-6051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 참여 쉬워진다

▶ 기술제안입찰 대상 확대, 기술제안건수 50개 이내 축소 등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기술제안입찰에 중소기업의 참여를 촉진하고 그간의 제도적 허점을 보완하기 위해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한다고 밝혔다.

기술형입찰제도*는 가격위주 입찰제인 최저가 등과 달리 기술과 가격을 종합 평가하여 낙찰자를 결정하여 건설기술력 증진에 효과적인 입찰제도이다.

* 기술형입찰제도: 일괄(터키), 대안, 기술제안입찰

○ 특히 기술제안입찰은 설계서를 평가하는 터키와 달리 발주청에서 설계를 한 후 업체는 공기단축, 공사비 절감 등을 위한 기술제안서만 제출하므로 참여업체의 입찰부담이 적고 공사비 절감효과가 큰 장점이 있어 2008년에 제도를 도입하였다.

* 기술제안입찰 건수(주로 건축부문에 적용): 2건('10.) → 6건('11.) → 15건('12.)

○ 그러나 기술제안입찰제도에 대한 발주청의 인식부족 및 제도적 미비점 등으로 SOC 분야에는 적용사례가 없고 최근 업체들간 소모적인 경쟁이 과열되면서 제안 시 기술건수가 초기 50개에서 최근 1천여개에 육박해 제안서 작성비용이 가중되어 중소기업의 참여가 쉽지 않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 이에 따라 국토교통부는 업체들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업계, 관계기관 등과 협의를 거쳐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으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 주요 내용

① 기술제안입찰 적용대상 범위가 확대된다.

기존에는 기술제안 대상이 터키와 동일한 대규모·고난이도 공사로 제한되어 사실상 중소기업의 참여가 어려운 측면이 있었으나 기술제안 대상을 완화하여 중규모 수준의 공사에도 기술제안입찰을 적용할 계획이다.

* 사례) 기존 : 교량 연장 500m이상이며 경간장 100m 이상, 터널 3km 이상 등

→ 개선: 교량 연장 500m이상 또는 경간장 50m이상, 터널 1km 이상 등

② 기술제안 건수를 제한한다.

최근 입찰업체간 과당경쟁으로 기술제안 건수가 증가하고 있으며(평균 500건 이상) 불필요한 기술제안도 남발*되어 심도 깊은 기술심사가 어렵고 업체들의 부담이 가중되어 제안건수를 핵심기술 위주로 50개 이내로 제한토록 할 계획이다.

* 사례) 자전거보관대 증설, 벽지 변경 등 불필요한 제안도 다수

③ 제안별로 적격 여부를 심의한다.

기존에는 전체 제안서에 대해 적격여부를 판정하여 불필요한 제안에 대한 채택여부가 모호하여 발주청-낙찰자간 시비가 빈발하였다.

앞으로는 설계심의 과정에서 각 제안별로 적격여부를 결정하고 채택된 제안은 발주청에서 수용하거나 채택되지 않은 경우 계약금액을 조정할 계획이다.

* 사례) 기술제안서 적격사업임에도 불구하고, 91건의 기술제안 중 25건만 채택 → 제안사와 발주청간 갈등 발생

④ 기술평가 전 사전검증을 강화한다.

에너지 절감량, 유지보수비용 개선효과 등의 기술제안 시 객관적·전문적인 사전검증 제도가 미흡하여 평가의 신뢰성이 저하될 우려가 있었다.

이에 따라 에너지절감 등 특정분야에 대한 기술제안에 대해서는 필요시 평가전에 외부전문기관 등에 정량적 사전검증을 의뢰하여 심도 있는 심의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상과 같은 활성화 방안의 정상적 추진을 위해 국토교통부는 금년 7월까지 관련 규정을 정비할 계획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044)201-3564

개발제한구역 48곳, 걷고 쉬고 체험하는 공간으로

▶ 걷는 길·경관·여가녹지·전통문화 4개 분야 5년간 1천억원 투입

전국의 개발제한구역 48곳이 도시민의 걷는 길, 여가와 전통문화 및 자연환경·생태 체험 공간으로 거듭난다.

○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민의 생태휴식 공간 조성을 위해 개발제한구역의 뛰어난 자연환경을 이용하여 자연, 역사, 체험이 어우러진 생활문화 공간을 조성한다. 이 사업에 향후 5년간 1,000여 억 원을 투입할 예정이다.

○ 금년에는 개발제한구역이 있는 90개 시·군·구로부터 공모 신청을 받아 사업제안서 평가 및 현장조사를 거쳐서 48개 친환경·문화사업을 5.6(월) 최종 선정하였다.

사업은 4개 분야로 시행되며, 걷는 길 21개(총 연장 116.3km), 여가녹지 8개(54,974㎡), 경관 17개, 전통문화 2개 사업이 있다.

① 걷는 길(누리길)은 지난 3년간(2010-2012) 총 연장 116.3km를 조성하였으며, 향후 관할 지자체와 협의하여 권역(수도권, 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창원)별로 중심도시를 외곽에서 벨트형으로 두르는 둘레길을 완성할 계획이다



<고양(행주산성-서삼릉) 누리길>

② 여가녹지는 원칙적으로 국가가 매수한 토지나 기타 유휴 국공유지를 활용하여 조경수 식재, 야외수영장, 분수, 실외 체육시설 기타 여가시설 등을 설치하여 도시민들이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참고로 정부(LH공사가 대행 중)가 개발제한구역 내에서 현재 까지 매수한 토지는 1,198필지 20,707천㎡이다.



<대구시 수성구 패밀리파크(여가녹지)>

③ 경관사업은 도로변에 수목이나 화초를 심거나, 조명시설 및 조경물, 전망데크를 설치하는 등 경관이 훼손된 지역을 복구하거나 경관이 수려한 지역을 도시민들이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시설을 설치하는 사업이다.



<대구 달서구 도원지 수변공간 사업 조감도>

④ 전통문화 사업은 개발제한 구역내 문화재나 문화적 가치가 높은 시설이나 지역을 중심으로 역사문화 체험공간으로 조성하여 도시민들이 이용할 수 있도록 하는 사업이다.



<전통문화사업 개념도(장승솟대)>

- 국토교통부는 총 209억원의 예산을 들여 이번 선정된 사업들에 대해 해당 시군구의 재정자립도에 따라 사업비의 70~90% (1억~5억)를 지원할 계획이다.
- 국토교통부 관계자에 따르면 “개발제한 구역은 개발행위를 제한만하고 방치하는 소극적 접근방식을 넘어 도시민들에게 보다 적극적인 생태체험, 여가 문화 서비스를 제공하는 공간으로 변화할 필요가 있으며, 이번 친환경·문화 사업을 통하여 보다 많은 도시민들이 개발제한구역을 여가 휴식공간으로 이용함으로써 장기적으로 구역 주민들의 소득증대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녹색도시관
O44)201-3742

부실·불법 전문건설업체 실태조사 착수

▶ 등록기준이 미달되는 부실불법업체
퇴출을 통해 건설시장 정상화 도모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전문건설업 등록·처분 행정기관인 시·군·구와 함께 5월부터 전문건설업체를 대상으로 등록기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는 '08년 이후 건설시장 규모는 크게 감소하고 있는 반면, 건설업체 수는 여전히 과도하여 수급 불균형*이 심화되고 있고 또한, 상당수의 건설업체가 부실·불법업체로 파악**됨에 따른 것이다.

* 건설수주액 및 업체수 변화(대한건설협회 및 전문건설협회 통계)

- 수주액(종합·전문 합계, 조원) : 176.4('07) → 150.1('11)
- 업체수(종합·전문 합계, 개사) : 56,878('07) → 56,617('13.3월), 전문 45,350개

**최근 3년간 실적이 없는 업체가 6,600여개사 (전체대비 14.6%)

- 부실·불법 건설업체 난립으로 인해 수주 질서를 교란 시키고 지나친 과당경쟁으로 인해 저가수주 만연, 부실공사 및 임금체불의 문제를 초래하고, 특히 능력 있는 업체의 수주기회를 박탈함으로써 건설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 이에 사실상 페이퍼 컴퍼니인 부실·불법 건설업체를 시장에서 퇴출시킬 필요가 있어 전문건설업체에 대해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실시하게 되었다.

* 종합건설업체는 기 실태조사를 실시('12.9월 ~ '13.3월)하였으며, 조사대상 5,050개 업체 중 1,751개(34.6%)업체를 적발하여 처분청(시·도)에서 청문 등 제재 조치 중

실태조사 대상은 '13년 주기적 신고 대상, 기성 실적이 일정규모 이상인 업체 및 조사필요성이 적은 일부 업종*을 제외한 약 29,000여 개 사가 될 전망이다.

* 주기적 신고 대상(매 3년마다 등록기준 충족여부 신고심사), 종합건설 겸업업체(실태조사 기 실시), 일정 규모이상 업체(최근 3년 평균 기성실적 철강재·준설업종 60억원이상, 기타 업종 20억 이상), 난방(1·23종) 및 가스(23종)업종 제외

이번 실태조사는 전문건설업체 등록·처분관청인 시·군·구 중심으로 등록기준 적합 여부를 심사하며, 1단계로 서류심사를 실시하고 서류심사 결과 의심업체에 대해서는 2단계로 현장점검을 거쳐 금년 8월말까지 실태조사를 마무리할 계획이다.

실태조사 결과 등록기준 미달 업체는 최대 6개월의 영업정지 또는 등록말소* 처분을 할 예정이다.

* 등록기준 미달로 영업정지 처분 후 미달사항 미보완 시, 3년내 동일 등록기준 미달 시

이번 실태조사를 통해 부실·불법업체의 시장 참여를 막아 능력 있는 업체간 건전한 경쟁 분위기 조성하고, 부실공사 및 체불 감소 등 건설시장의 정상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설경제과
(044)201-3509

공사중단 방지 건축물 정비 손쉬워 진다

- ▶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정·공포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특별법’)」이 제정(신계륜 의원등 22명 발의)되어 5월 22일자로 공포된다고 밝혔다.

이번에 공포하는 ‘특별법’은 공사중단으로 짓다만 건축물을 체계적 으로 정비하기 위해 제도를 새로이 마련한 것으로

- 국토교통부는 2년마다 실태조사를 통해 확인된 공사중단(착공신고후 2년이상)건축물을 대상으로 “정비기본계획”을 마련하고, 시·도지사는 “정비계획”을 수립하여 건축물 정비를 효율적으로 추진하며, 공사재개에 필요한 비용보조, 세제감면 및 시·도지사 정비기금을 통한 재정지원 등을 주요내용으로 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이 법이 시행되면 “전국에 산재한 약 860여개 동의 공사중단 건축물에 대하여 체계적인 관리와 정비가 가능해지고, 공사중단으로 인한 인근지역 주민 불편 등 위해요소 해소와 지역상권 활성화에도 일조 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향후, 국토교통부는 세부 시행내용을 담은 하위법령(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여, 1년 후인 2014년 5월 22일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 자료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55

동서남해안 8곳 ‘휴양·체험·생태벨트’ 조성

- ▶ 동해·고창·거제 등 해안 거점지역...
여가생활·지역경제 활성화 기대

동해·영덕·거제·진도·고창 등 동서남해안의 지역거점 8곳이 휴양·체험·생태벨트로 조성된다. 국민 여가생활 공간을 넓히고 지역경제를 활성화시켜 지역균형발전의 기반을 닦기 위해서다. 이를 위해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올해부터 거점지역별로 본격적인 설계 및 공사에 착수한다.

- ‘동서남해안권 발전 종합계획’에 포함된 해안권별 핵심사업과 박근혜 정부의 지역개발 공약인 ‘낙후지역 휴양·관광벨트 구축’ 사업과 연계하여 해안권 거점지역별로 2013년부터 사업에 착수하는 등 해안권 개발사업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 동서남해안의 지역거점을 대표하는 경남 거제 지세포 해양레포츠타운 등 8개 사업(동해안 4, 남해안 3, 서해안 1)이 금년 하반기부터 설계와 공사가 착공되며, 2013년부터 2016년까지 약 1,181억원(국비 563.5억원, 지방비 617.5억원)이 투입될 계획이다.

동해안권은 맑고 청정한 동해바다, 다채로운 지형·해안경관 등 청정한 이미지의 자연·생태적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가족체험·휴양·레포츠 벨트가 조성된다.

- 광역교통망 확충(제2영동고속도로, 상주~영덕 고속도로)에 따른 동해안 관광객 수요 증가에 대비, 동해 망상 및 영덕 고래불 해수욕장에 다기능적 기능을 갖춘 「휴양·체험형 관광 거점」을 조성하고,

○해맞이 명소인 울주 간절곶과 동해안 관광의 메카인 정동진 해안단구에 탐방로를 조성하여, 해안경관과 생태자원을 잇는 동해안 일주형의 「동해안 블루투어로드」를 조성한다.

서해안권은 서해안의 역사문화를 주제로 학습·체험형 관광벨트를 구축하고, 갯벌·철새 등 세계적 생태관광자원을 활용한 관광벨트가 조성된다.

○고창의 람사르 갯벌생태지구가 자연환경을 보전하면서 자연을 체험할 수 있는 「생태관광거점」으로 조성된다.

남해안권은 섬, 리아스식 해안 등 독특한 자연자원을 활용하여 복합 체험·휴양문화관광지대가 조성된다.

○수려한 다도해 관광자원을 활용하여 서남해안 해양관광 및 물류 거점항으로 진도항 배후지를 개발함으로써 환황해 경제권 및 동남아시아 등 세계로 진출하는 전진기지로 육성한다.

○고흥이 우주과학 중심지로 부상하면서 국내 유일의 우주과학 시설과 천혜의 관광자원을 연계한 우주테마형 대규모 복합 휴양문화공간이 조성된다.

○거제 지세포는 남해안권 관광중심축으로 세계적 해양관광 휴양지대로 조성하기에 적합한 지역으로 거가대교 개통과 더불어 부산~거제~통영을 연결하는 광역적 관광 거점 축으로 남해안 발전 모델로 구축된다.

이와같이 해안권별 거점사업이 완료되면 국민 여가생활 공간을 넓히는 것은 물론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해 지역균형발전에 실질적인 기여를 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아울러 국토교통부는 금년부터 착수되는 거점사업 이외에도 해안권별로 지역경제를 선도할 수 있는 사업을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해안권 개발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 지세포 해양레포트타운 조성사업 조감도 >



< 고흥 우주랜드 조성사업 조감도 >

■ 자료 : 국토교통부 동서남해안및 내륙권 발전기획단
(044)201-4554
국토교통부 해안권발전지원과 기획총괄과
(044)201-4546

도시재생 활성화 법적 기반 마련

▶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국무회의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공사중단 장기방치 건축물의 정비 등에 관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지원하기 위해 지난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이하 “도시재생특별법”이라 함)」이 5.2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인구 감소, 지역경제 침체, 주거환경의 노후화 등으로 쇠퇴하는 도시지역에 활력을 불어넣는 **도시재생시책이 본격적으로 추진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이 마련되게 된 것이다.

도시재생특별법의 주요 내용은 크게 주민·지자체 중심의 **계획수립, 중앙과 지방의 조직구성, 도시재생사업의 지원, 선도사업** 등 4가지로 요약된다.

○계획체계는 정부가 국가 도시재생전략인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제시하고, 주민·지자체·지역전문가 등이 도시재생활성화지역에 각종 H/W 및 S/W 재생사업을 종합한 재생계획을 수립하게 된다.

○추진조직으로, 국무총리를 위원장으로 하는 도시재생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교육, 컨설팅 등 주민 재생역량 지원을 위해 도시재생지원기구(중앙) 및 도시재생지원센터(지방) 등을 설치하도록 하고 있다.

○국가·지자체는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하여 도시재생에 필요한 비용을 보조·융자할 수 있고, 국공유재산의 처분, 조세부담금

감면, 건폐율·용적률·높이제한주차장 설치 기준 완화 등 규제 특례를 지원할 수 있다.

○그리고, 도시재생이 시급하고 파급효과가 큰 지역을 선도지역으로 지정하여 예산 및 인력을 우선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금번 도시재생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주민·시장상인·지역전문가와 지자체 등이 중심이 된 경제·사회·문화 등 종합적 재생의 방향으로 도시정책의 패러다임이 전환되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기존의 재개발·재건축 위주의 물리적 정비가 도시환경 개선에 나름 성과도 있었지만, 경기침체기를 맞아 사업이 무산되거나 낮은 원주민의 재정착률 등으로 실질적 재생으로 이어지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다.

○또한, 지역의 고유한 역사·문화 자산 등을 최대한 활용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맞춤형 도시재생이 추진될 수 있는 틀이 마련되었다.

○특히, 각 부처가 개별법에 따라 분산 지원하고 있는 각종 H/W 및 S/W 사업들이 주민·지자체가 수립하는 재생계획에 따라 연계·통합되고 국가에서는 관계부처간 협업으로 패키지 지원이 가능하게 되었다.

국토교통부 국토도시실장(정병윤)은 “제정된 도시재생특별법의 차질없는 추진을 위해 **11월까지 시행령 등 하위법령을 제정하고, 12월까지 국가도시재생기본방침을 마련할 계획**”이며

○“도시재생선도지역은 빠르면 연말까지 지정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 자료 : 국토교통부 도시재생과
(044)201-3730

원룸형 주택 공급, 지역상황 맞게 탄력적으로 . . . 국무회의 의결

▶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개정안, 5.28 통과

국토교통부(장관 서승환)는 지난 4월 1일 (월) 발표한 「서민 주거안정을 위한 주택시장 정상화 종합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로, ○민간주택 착공 연기사유 확대,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주택법 시행령」,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이 5.28(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이번 시행령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4.1대책 후속조치 관련 》

- ① 주택 착공시기 연기사유 확대 (주택법 시행령)
 - 시장상황이나 사업여건에 따라 탄력적으로 주택공급시기를 조절 할 수 있도록 사업계획승인 후 착공 연장사유를 추가 (이미 사업계획승인을 받은 사업장도 개정안 적용가능)
 - 해당 지역의 미분양 주택 증가 등으로 사업성이 악화될 우려가 있다고 사업계획승인권자가 인정하는 경우 착수 연기 허용
 - 공공택지의 개발조성을 위한 계획에 포함된 기반시설의 설치가 지연되는 경우 착수연기 허용
- ②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입지제한 근거규정 마련 (주택법 시행령)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은 현재 도시지역에 입지가 가능하지만, 지자체장이 도시지역 중 도시관리, 주거환경 등에 지장이 있다고 조례로 정하는 구역은 입지를 제한할 수 있도록 규정
- ③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 주차장 기준 강화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 원룸형 도시형생활주택에 대해 전용면적 60㎡당 1대로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하던 것을, 30㎡미만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5대, 30~50㎡이하인 원룸형 주택은 세대당 0.6대의 주차장을 설치하도록 규정
 - 다만, 이미 사업계획 승인 또는 건축허가를 신청(건축심의를 신청한 경우도 포함)한 경우 기존의 주차장 기준을 적용
- ④ 주택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위원 확대 (주택법 시행령)
 - 변화하는 정책수요에 부합할 수 있도록 주택정책심의위원회 위원수를 20인에서 25인으로 확대하고, 당연직 위원에 금융위원회 부위원장을 포함
- ⑤ 공동주택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감사 선출 방법 개선 (주택법 시행령)
 -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의 입주자대표회의 회장과 감사는 직선제 선출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나, 입후보자가 없거나 선거 후 당선자가 없을 때에는 관리규약으로 정한 경우 간선제 선출을 허용

⑥ 입주자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의 비내력벽
철거기준 완화 (주택법 시행령)

- 입주가 공유가 아닌 복리시설(예:상가 등)의 비내력벽을 철거하기 위해서는 전체 입주자의 2/3이상의 동의를 얻고 해당 지자체의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비내력벽임을 증명할 수 있는 도면 및 사진을 제출하는 경우에 해당 지자체 신고만을 통해 철거 허용

이번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시행령 개정안은 관보게재 절차 등을 거쳐 6월 4일 경 공포될 예정(공포일은 절차 지연시 변동 가능)으로,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 개정되는 세부내용은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 자료 : 국토교통부 주택건설공급과
(044)201-3369

건설기술진흥법 개정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기술기준과

□ 개정일자 : 2013. 05. 22.(법률 제11794호)

□ 시행일자 : 2014. 5. 23.

□ **개정이유** : 건설기술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관련 산업의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건설기술 관리체계를 규제 중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과 지원 중심으로 전환하고, 이를 위하여 제명을 「건설기술관리법」에서 「건설기술 진흥법」으로 변경하며, 세분화된 건설기술용역 업무 영역 및 건설기술인력 분야를 통합하여 국내 건설기술산업의 해외 진출과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건설기술자, 감리원 및 품질관리자 등 건설기술인력의 통합(안 제21조)

건설기술인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고 건설기술의 통합적 발전 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설계 및 시공 등을 수행하는 건설기술자, 감리를 수행하는 감리원, 품질검사를 수행하는 품질관리자 등으로 구분되어 있던 건설기술인력을 건설기술자로 통합하여 관리하도록 함.

나. 건설기술용역업의 육성(안 제25조제2항)

1) 건설기술용역업의 발전 및 고도화를 위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건설기술용역업자에게 건설기술 연구·개발사업의 성과를 활용할 수 있게 하고, 건설기술 및 국내외 건설기술인력에 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함.

2) 건설기술의 관리에서 관련 산업의 진흥으로 정책 패러다임을 전환함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의 국제경쟁력 강화를 실질적으로 지원하는 건설기술 정책 추진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건설기술 업무 영역의 건설기술용역업으로의 통합(안 제26조)

1) 지금까지 국내의 건설기술용역업은 미국·영국·일본 등 외국과 달리 설계, 감리 및 건설사업관리 등 세부업무별로 구분하여 각각 다른 기준에 따라 신고·등록·관리 및 사업수행능력평가 등을 하고 있어 설계나 감리 등을 함께 수행하는 업체나 발주청의 불필요한 부담이 발생하고 있고 업무 영역 사이에 기술교류도 단절되어 경쟁력 제고에 문제가 있음.

2) 세분화된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건설기술용역업으로 통합하여 시·도지사에게 등록하도록 하되, 발주청이 발주하는 건설기술용역 중 건설공사의 계획·조사·설계를 수행하려는 자는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에 따른 엔지니어링사업자 또는 「기술사법」에 따라 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만 등록할 수 있도록 함.

3) 건설기술 업무 영역을 통합하여 관련 산업의 체계적인 관리와 육성이 가능해지고 관련 업체의 효율적인 업무 추진과 발주청의 행정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됨.

라. 감리와 건설사업관리의 통합(안 제39조부터 제41조까지)

발주청의 사업관리 역량을 강화하고 관련 업체의 해외진출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지금까지 건설공사의 시공 단계에 국한되었던 감리제도를 건설공사의 기획단계부터 유지·관리까지 포괄적·탄력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건설사업관리로 통합함.

■ 자료 : 법제처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3. 05. 23(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208호)
- 예고기간 : 2013. 05. 23 ~ 07. 02(41일간)
- 개정이유

투자활성화 종합대책('13.5.1)에 따라 산업단지개발사업의 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고,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국가산업단지·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의 승인신청 기간을 현행 1년 6개월에서 2년으로 연장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 가. 정부조직 개편에 따라 미래창조과학부 소속 공무원을 산업입지정책심의회 위원에 추가(안 제2조 의3제3항)
- 나.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에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협동조합 및 「상공회의소법」에 따른 상공회의소를 추가하여 산하 조합원 및 회원들에게 저렴하게 산업시설용지를 공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9조제1항제2호다목)
- 다. 최근 어려운 경제여건을 감안 산업단지개발사업시행자의 산업단지개발실시계획 승인신청기간을 6개월 연장(1년 6월→ 2년)하여 사업시행자의 자금 확보의 어려움을 완화함.(안 제21조제1항, 제22조제1항 및 제22조의2제1항)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7월 2일까지 아래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장관(참조 : 산업입지정책과장)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산업입지정책과(☎ 044-201-3675, 팩스 044-201-5564)

■ 자료 : 법제처

건축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 입법예고일 : 2013. 05. 15(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86호)

□ 예고기간 : 2013. 05. 15~ 06. 24(41일간)

□ 개정이유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시·도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할 수 있도록 하고,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가스기술자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며,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그 밖에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주요내용

가.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특별시·광역시·도의 조례로 규정 (안 제23조의2제1항 제3호 개정)

(1) 다중이용건축물,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른 집합건축물 (연면적의 합계가 3천제곱미터 이상 건축물로서 「주택법」에 따른 관리주체가 관리하는 공동주택은 제외) 또는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소유자나 관리자는 해당 건축물의 사용승인일을 기준으로 10년이 지나면 2년마다 정기점검을 실시하도록 하고 있으며, 점검 대상 중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다중이용업의 용도로 쓰는 건축물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 또는 시·군·구의 건축조례로 정하도록 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지역 특성에 따라 통일성 있게 특별시·광역시·도(道)의 건축조례로 정기점검 대상 건축물을 정할 수 있도록 함.

(2) 지역 특성을 감안하여 정기점검 대상을 시·도 조례로 합리적으로 규정할 것으로 기대됨.

나. 가스·정보통신설비에 대한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의무화 (안 제91조의3제2항 제2호 개정 및 제3호 신설)

(1) 연면적 1만제곱미터 이상인 건축물 등에 전기, 승강기, 급수, 배수, 환기, 난방 등의 건축설비를 설치하는 경우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건축전기설비기술사, 발송배송기술사, 건축기계설비기술사 또는 공조냉동기계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하고 있으나, 최근 전문화·복잡화·다양화 되어 있는 전화, 초고속정보통신, 지능형홈네트워크, 공동시청안테나, 유선방송수신 등 정보통신설비와 건축물내 가스 폭발 사고 등 안전성이 강조되는 가스설비에 대하여는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 규정이 없음

(2)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기술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일정 규모에 해당하는 건축물의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에 대하여 설계자와 감리자가 「국가기술자격법」에 따른 가스기술자와 정보통신기술사의 협력을 받도록 함.

(3) 가스설비 및 정보통신설비의 적정 설계와 기술 안전성이 확보될 것으로 기대됨.

다. 공작물의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하기 위한 근거 마련 (안 제118조제4항 신설)

(1) 공작물의 경우에도 건축물과 같이 구조안전을 확인하도록 준용 규정을 두고 있으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하고 있지 않아 안전성 검토가 건축물 수준으로 과도하게 이루어지거나 일부에서는 검토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어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명확화 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하고자 함

(2) 공작물에 적합한 구조안전 확인 방법을 제시함으로써 국민 부담을 최소화하면서 강풍 등에 대비하여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됨

□ 의견제출

이 『건축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로 2013년 6월 24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에서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세종정부청사 6동) 국토교통부
건축기획과(☎ 044-201-3763, fax 044-201-5574)

■ 자료 : 법제처

하천법 일부개정법률 (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 입법예고일 : 2013. 05. 07(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5호)

□ 예고기간 : 2013. 05. 07 ~ 06. 17(42일간)

□ 개정이유

하천의 효율적 관리 등을 위하여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도록 하며 , 토지의 매수청구제도를 일부 보완하는 동시에 하천법상 각종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국민의 불편·부담을 해소하는 한편 , 일부 과태료 부과·징수권한을 시·도지사의 권한으로 이양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려는 것임 .

□ 주요내용

가 . 하천기본계획의 수립기준을 국토교통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도록 함으로써 하천 기본계획 수립의 일관성과 통일성을 확보 (안 제25조제4항 신 설)

나 . 낚시금지 등 하천법 제 46조제6호 및 제7호를 위반한 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 징수는 시 도지사가 시행하도록 개정 (안 제98조제4항)

1) 현재 하천법 제 46조제6호 규정에 따라 하천구역 내에서 야영·취사 및 낚시행 위의 금지구역 지정권자는 시·도지사이므로 업무의 연계성 , 효율적 하천관리를 위해 이에 대한 과태료 부과·징수업무도 시·도지사가 시행하는 것이 바람 직함

2) 금지구역 지정권자와 과태료 부과권자를 시·도지사로 일원화 함으로써 효율적 하천관리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됨

다 . 매수청구대상을 토지 뿐만 아니라 그 토지 위의 정착물까지 가능하도록 개정

1) 현 매수청구제도는 토지만을 보상하도록 되어 있고 , 매수청구대상토지에 위치 하는 건축물 등에 대한 보상 규정이 부재하여 매수청구신청인에 대한 정당한·완 전한 보상이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2) 따라서 토지 위의 정착물에 대한 매수청구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국민의 손실에 대한 정당한·완전한 보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라 . 하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하천공사허가 (법 제30조), 하천점용 허가 (법 제33조), 하천예정지 등에서의 행위허가 (법 제38조), 하천수 사용 허가 (법 제 50조)에 대해 규정되어 있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 .(안 법 제89조 삭제)

- 1) 도로점용허가 등 다른 법률에 의한 유사 점용허가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소액이거나 없는 데 반해 , 「하천법」의 경우 허가수수료가 존재하고 있어 , 국민의 부담 가중 및 다른 법령과 비교하여 형평성측면에서도 문제가 발생 중임
- 2) 하천법상 허가 시 부과되는 허가 수수료를 폐지하여 다른 법령과의 형평성을 제고하는 동시에 국민의 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함

□ 의견제출

이 「하천법」 일부개정 법률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로 2013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 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 · 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 · 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하천계획과

(전화 : 044-201-3621, 팩스 044-201-5557)

■ 자료 : 법제처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 (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

□ 입법예고일 : 2013. 05. 07(국토교통부 공고 제2013-156호)

□ 예고기간 : 2013. 05. 07 ~ 06. 17(42일간)

□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가 . 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업지구의 지정·해제기준 및 절차, 행위제한 적용 시점 등을 개별법에서 명확하게 규정하도록 근거를 마련하고,

나 . 제도개선과제의 성실한 이행을 촉구하기 위해서 토지이용규제심의위원회에서 제도개선과제의 이행실적 및 조치계획에 관한 내용을 심의하여 국토교통부장관이 주기적으로 개선사항을 점검할 수 있도록 하며,

다 . 불필요한 토지이용규제의 신설 억제를 위해 토지이용규제평가단이 수행하는 업무에 신설되는 지역·지구 등의 필요성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에 대한 사전 평가 업무를 추가하는 한편 ,

라 . 토지이용과 관련 된 지역·지구 등의 효율적 관리 및 평가의 질적 향상을 위해 지역·지구 등의 현황, 지정실적 및 행위제한의 적정성 , 운영방 향 및 개편에 관한 사항 등 토지이용규제와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등에 대한 기초연구를 실시할 수 있도록 근거규정을 마련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 의견제출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기관 , 단체 또는 개인은 2013년 6월 17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 (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국토교통부 도시정책과(전화 : 044-201-3725, 팩스 044-201-5569)

※ 개정안의 전문내용은 국토교통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 정보-입법예고 참조.

■ 자료 : 법제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

□ 주관부처 :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 입법예고일 : 2013. 5. 21.

□ 예고기간 : 2013. 5. 21. ~ 6. 17(28일간)

□ 개정이유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주요내용

가. 청약저축(주택청약종합저축 포함) 이자율 규정방식 변경(안 제5조의2제5항) 시중금리 및 국민주택기금 대출금리의 변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여 국민주택기금의 안정적 수지관리에 기여할 수 있도록 현재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고 있는 청약저축 이자율을 국토교통부장관이 고시로 정하도록 변경함으로써 이자율 변경 소요기간을 단축하고자 함.

□ 의견제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중 일부개정령(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로 2013년 6월 17일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라며, 더 자세한 내용을 알고 싶은 분은 우리부 홈페이지(<http://www.molit.go.kr>) 정보마당/법령정보/입법예고 란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예고사항에 대한 의견(찬·반 의견과 이유)

나. 성명(법인·단체의 경우 단체명과 그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다. 보내실 주소 : 세종특별자치시 도움6로 11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
(전화:044-201-3351, 팩스 : 044-201-5530)

■ 자료 : 법제처

배기 기능의 포트와 시공 모니터링 장비를 이용한 콘크리트 균열의 에폭시 건식 보수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Y&K TECH CO.,LTD. 와이앤케이텍 (주)
	(주)서영엔지니어링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94호
- 기술분야 : 토목/토목구조물 보수보강 (포장보수제외)/토목콘크리트 보수보강

○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부위에 에폭시를 주입 충전하여 콘크리트 구조물이 본래의 제 기능을 다하도록 보강시키는 공법으로써 콘크리트 구조물의 균열보수시공에서 균열내부는 표면에서 완전히 밀봉된 상태로 에폭시가 주입되며 기존 주입기구인 주사기형 주입포트의 구조를 개량하여 균열부에 주입포트를 통하여 에폭시를 주입하는 중에 주입 중이 아닌 다른 주사기는 균열내부의 에어를 배기할 수 있도록 오픈된 구조로 되어 있어 에폭시의 주입을 원활하게 하여 높은 시공품질을 달성한다. 또한 이액형인 에폭시를 자동으로 정밀하게 배합하고 주입압력, 주입량, 진행압력, 작업시간 등을 모니터링하고 출력할 수 있는 균열 주입 자동화 시스템을 결합하여 사용할 수 있는 기존의 저속저압 주입방식인 주사기공법과 기계식 주입방식인 포트좌대 공법의 장점만을 병행하여 기술로 정립하고 콘크리트 균열보수의 품질향상과 내구성 향상 및 작업효율을 향상시킨 첨단공법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에어벤트, 재주입, 저압완충 기능의 주입기구와 자동압력조절, 주입진행상황 등의 모니터링 및 기록이 가능한 장비를 적용하여 균열내부로 에폭시를 충전시키는 정밀 균열보수공법

도넛형 중공형성체를 이용한 이방향 중공슬래브(GB-SLAB)공법

1. 신기술개발자

법 인 명	삼성물산(주)
	한양대학교 산학협력단(서울)

2. 신기술의 개요

- 지정번호 : 제695호
- 기술분야 : 건축/철근콘크리트/철근콘크리트 골조

○ 내용요약

본 신청기술은 중공률을 극대화하면서도, 기존 이방향 중공 슬래브의 한계인 휨 강성 부족, 부착 강도 저하 및 응력집중에 따른 취성 파괴 및 극한 하중 저하를 방지하기 위하여 내부에 흠을 형성하는 도넛형 중공 형성체를 개발함으로써, 슬래브 자중을 감소시키면서도 휨에 대해 역학적으로 효율적인 단면 형상을 형성시키는 이방향 중공 슬래브 공법이다. 이와 더불어 중공형성체 재료로 유리섬유 보강 고강도 플라스틱과 바이오 플라스틱과 같은 기능성 플라스틱을 적용하여 기존 유사 공법 대비 경제성, 구조성, 친환경성이 극대화된 공법이다. 또한, 도넛형 중공형성체에 스페이서가 일체화되어 철근과의 체결이 용이하고 상하부 주근과 조립되어 유닛 모듈을 형성하기 때문에, 기존 유사 공법의 시공 프로세스 보다 시공성이 효율화되었다.

○ 기술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콘크리트의 자중을 감소하기 위해서 콘크리트 내부에 매입되는 부재로서 내부에 흠을 형성하는 도넛형 중공형성체와 그러한 도넛형 중공형성체를 이용하여 2방향 저항특성을 발휘할 수 있도록 완성한 이방향 중공슬래브 공법 및 그 시공법

※ 본건 신기술의 구체적 내용은 국토교통과학기술진흥원(<https://www.kaia.re.kr/>) 건설신기술정보마당에 등록되어 있으니 필요한 경우에는 열람하시기 바랍니다.

건설기술심의 연왕

2013년 제5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
- 심의일자 : 2013. 6. 19.(수)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3-05-01	대안입찰 설계평가	명동마리나 방파제 설치공사	· 위 치 : 창원시 진해구 명동 일원 · 사업내용 : 방파제 설치 L=480m · 사업비 : 310억원(공사비 4,613, 부대비등 1,778) · 사업기간 : 2013 ~ 2016년	창원시

2013년 제6회 경상남도 지방건설기술심의 개최 계획

- 건 명 :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외 1건
- 심의일자 : 2013. 6. 11.(화)

의안 번호	요청사항	사 업 명	사 업 개 요	발주청
2013-06-01	입찰방법 (기타공사)	창원도시철도 건설사업	· 위 치 : 마산합포구 가포동~진해구 석동 · 사업내용 : 도시철도 건설(노면전차) : L=30.36km · 사업비 : 6,391억원(공사비 4,613, 부대비등 1,778) · 사업기간 : 2015 ~ 2020년	창원시
2013-06-02	실시설계 (적정성)	횡천강 고향의 강 조성사업	· 위 치 : 하동군 횡천면~청암면 일원 · 사업내용 : 하천정비 L=9.3km, B=50~100m · 사업비 : 224.6억원(공사비173.2, 보상비등51.4) · 사업기간 : 2012 ~ 2016년	하동군

■ 건설지원과 기술심의담당 (055)211-4625

계약심사 연왕

(단위:백만원)

기 간	분 야	건수	심사현황			비고	
			요청금액	심사금액	절감액		
2013년 5월	계	55	66,309	60,916	5,393	8.13%	
	공사	토목	17	40,214	36,522	3,692	9.18%
		건축	10	13,073	12,414	659	5.04%
		기타	8	8,101	7,490	611	7.55%
	용역	11	3,688	3,291	397	10.78%	
물품	9	1,233	1,199	34	2.76%		

■ 회계과 계약심사담당 (055)211-3548

온라인 텀키마당 전국 순회교육

- 일시 : '13. 6. 21(금) 14:00~16:30
- 장소 : 경상남도 인재개발원 대강당
- 주최 : 국토교통부

- 주요 내용
 - 온라인 텀키마당 사용설명
 - 설계심의 운영 표준안 설명
 - 기술제안입찰 활성화 방안 등
- 참석 : 업무 담당공무원 및 유관기관 관계자 등 약 200여명

※ 문의 경상남도 기술심의담당
☎ 055-211-4626

2013년도 건설기술세미나

- 일시 : '13. 6. 10.(월)~6.14.(금) 14:00~17:00
- 장소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별관 교육장
- 주최 : 한국건설기술인협회

- 주요 내용
 - 해외토목 설계의 수행과 이해
 - 자원순환형 콘크리트 적용기술사례
 - 국내외 대공간 구조물의 요소기술 적용사례
 - 싱가포르 마리나베이샌즈호텔 프로젝트 시공기술 소개
 - 해외건축 프로젝트 BIM기술적용 소개 등
- 특급기술자 전문교육 학점으로 인정됨.

※ 문의 한국건설기술인협회 교육관리팀
☎ 02-3416-9241

위 내용은 경상남도 홈페이지 <http://www.gsnd.net> (실국홈페이지) 및
경상남도 건설정보 <http://gnci.gsnd.net>에서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게재 신청 건설관련 자료 및 원고도 받습니다.

TEL : (055)211-4623~6

FAX : (055)211-4619

e-mail : babyhye@korea.kr

이 자료는 업무 참고용입니다.